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수상의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1월 6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수상이 과거 일본의 조선침략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 양 정부가 원하는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과거 문제에 대한 진실된 매듭이 하루 속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1.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과거 일본 수상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 하면서 과거사에 대해 '사죄'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보수 인사들은 언제까지 한국사람들에게 '사죄'해야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죄는 과거사 인식 문제를 애매하게 흐리면서 입으로만의 사죄에 그쳤다.

우리는 호소카와 수상이 8월 취임하면서 '2차 대전은 침략전쟁이었으며, 잘못된 전쟁'이라고 인정한 점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침략행위였음을 이번 방한에서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호소카와 수상은 최근 을사5조약 정미 7조약 한일합방조약등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었고 고종황제의 비준도 없었다는 사실 확인들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원인무효임이 드러났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93년 8월 4일 미와자와 정부는 제 2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제2차 진상조사 보고를 하였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부분적이나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위안부의 총 수, 책임자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또한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등 법적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 호소카와 수상은 이번 방한에서 그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여야 '사죄'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3. 전쟁범죄 방지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최대한 준수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후처리에서 일본은 2차대전의 같은 전범국인 독일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이 한국을 비롯한 아세아의 민중들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염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이 진실로 세계에서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데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후처리를 그동안 확립된 국제법을 최대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기획있을 때마다 여러차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세아 여러나라의 전쟁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세아 민중들과의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 지지 못하며, 미래지향적인 아세아인의 연대와 아세아의 평화는 이루어 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엄청난 굶주림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할 수 있는 가장 성의있는 사죄라는 사실을 호소카와 수상이 명심하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1993년 11월 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